

# 가상통화(virtual currency) 현황 및 대응방향

2017. 9.

관계기관 합동

## 목 차

I. 그간의 경과	1
1. 가상통화 등장 배경	1
2. 주요국 대응현황	2
II. 가상통화의 성격	3
III. 가상통화의 효용 및 예상되는 문제점	4
1. 가상통화의 효용	4
2. 가상통화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	4
3. 가상통화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불가피	5
IV. 대응방향	6
1. 거래 투명성 확보,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	7
2.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	11
3. 규제·감독 문제 검토	13
V. 향후 계획	13

## I. 그간의 경과

### 1. 가상통화 등장 배경

◇ 가상통화\*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, 주요 국제기구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·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“가치의 전자적 표시(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)”를 의미

\* 용어의 출처는 불분명하나, 디지털통화(digital currency)·암호통화(crypto currency) 등의 용어가 혼용되다가 최근 가상통화(virtual currency)로 통용하는 것이 일반적

- '09.1월, 최초의 가상통화인 **비트코인**\* 등장 이후 이더리움, 리플 등 다수의 가상통화(약 850여개)가 개발되어 유통중

\* 나카모토 사토시는 '08.11월 보고서(Bitcoin: A Peer-to-Peer Electronic Cash System)를 통해 금융기관 개입 없이 P2P 네트워크를 활용한 결제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

- ①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제도에 대한 불신·반감으로 나타난 반작용(Occupy Wall Street 운동)의 영향으로 등장

-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분산원장 기술인 **블록체인**\* 기반의 가상통화를 구현

\*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공개하며, 거래시마다 이를 대조해 위조를 방지하는 분산형 시스템

- ② ICT 발전에 따른 핀테크 등 새로운 첨단기술에 대한 기대

- ‘블록체인’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신선한 충격과 낙관적 기대로 투자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

- ③ 저금리·저성장 기조에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‘새로운 투자대안(alternative investment)’의 하나로 인식

- 언론에서도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거뒀다는 사례들이 보도

➡ 가상통화의 성격 및 효용에 대해 균형적인 관점에서 분석·평가하고, 규제·감독 필요성 여부를 차분하게 검토할 필요

### 2. 주요국 대응현황

-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, 감독·규제에 대해 각국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, 아직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음

- ① 가상통화 관련 범죄\* 단속 및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

\* 美 FBI는 비트코인으로 마약·총기를 거래한 웹사이트 실크로드 폐쇄('13.10월) 랜섬웨어 ‘워너크라이’는 피해자에게 복구비용으로 비트코인 요구('17.5월),

< 주요국 자금세탁방지 규제 사례 >

- 미국\*·캐나다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법률상 “화폐서비스업자(MSB)”로, 프랑스는 “결제서비스 사업자”로 분류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
- \*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(FinCEN), 자금세탁방지 규제 적용 지침 발표('13.3월)
- EU 집행위원회도 가상통화 거래업자, 지갑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하는 지침서 초안을 제출·논의중('16.7월)

- ② 과세와 관련, 미국·영국·독일 등 다수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‘자산’으로 정의하고, 국가별로 기존 자산 관련 세법을 적용중

- 다만,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입장

\* 미국, 영국, 일본 : 부가가치세 미부과 / 독일, 싱가포르 : 부가가치세 부과

- ③ 한편, 美증권거래위(SEC)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**Token** 공모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('17.7월)

\* 이더리움 플랫폼을 활용한 분산화된 자율조직(The DAO)이 11.5억 DAO Token을 발행하고, 1,200만 이더리움(ETH)을 조달('16.5월)

- 美상품선물거래위(CFTC)는 **LedgerX**社에 대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청산기관으로 인가('17.7월)

- ④ 영국 등 다수 국가들은 아직까지 가상통화와 관련한 별도의 감독·규제체계의 도입 없이 모니터링중

- 가상통화 취급업자 직접 규제(일본, 美 뉴욕주), 가상통화 유통·거래 제한(중국, 러시아) 등의 입장을 취하는 사례도 존재

➡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상통화 투자의 여러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경고\*하고 부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, 전면적인 규제에 나서지는 않고 있음

\* 美 증권거래위원회('13.7월), 美 금융소비자보호국('14.8월), 독일 연방금융감독청('14.2월) 등

## II. 가상통화의 성격

□ 가상통화는 정의 및 요건상 화폐, 통화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임

- ❶ 화폐(money)는 상품의 교환·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인 교환수단(예: 소금, 금, 은행권 등)으로, 3가지 본질적 기능을 지님
- 가상통화는 ① 지급의 제한 ② 높은 변동성, ③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화폐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(IMF, '16.1월)

### ※ 화폐의 3가지 본질적 기능

- 교환의 매개(medium of exchange) : 화폐는 임의의 재화와의 교환에서 반드시 수령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구매력을 보유
  -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의 활용 사례 및 거래규모가 제한되어 교환의 매개체로 한계가 있으며, 거래목적보다는 주로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
- 가치척도(unit of account) : 화폐는 개개의 상품과 가치를 통일적으로 표현하는 재료가 됨. 즉, 모든 재화·서비스의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
  -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 변동성, 불확실한 시장가치 등으로 가치척도로 사용 곤란
- 가치저장(store of value) : 화폐는 언제, 어떤 재화·서비스에 대해서도 대가로 수령될 것이 기대되므로,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하며 자산의 한 형태로 보유됨
  - 가상통화는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고, 향후 거래에 활용될 것이라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존하므로 장기적으로 가치를 저장하는데 한계

- ❷ 한편, 통화(currency)\*는 거래에서 지급·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지닌 은행권과 주화를 의미(현금통화 외 예금통화도 포함)

\* 소재가치(素材價値)를 중시했던 금속주의와 달리, '일반적 교환 내지 유통수단'으로의 화폐의 본질을 중시하는 명목주의에서 화폐와 통화의 개념은 구별하기 어려움

- 통화는 법률에 따라 법화의 지위가 부여되고 강제통용력을 가지나, 가상통화는 민간에 의해 개발되고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용

➡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“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”으로, 현 시점에서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려움

\* '가상통화'라는 용어도 법정통화, 화폐라는 인식을 가져오므로 신중할 필요

- 다만, 그 가치는 수요·공급에 따라 변동하며, 정부·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

## III. 가상통화의 효용 및 예상되는 문제점

### 1. 가상통화의 효용

-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통화는 중앙집중형 거래 시스템 대비 낮은 비용, 빠른 처리속도, 보안성 측면에서 장점 보유
  - 다수 중개기관이 개입된 기존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처리시간도 단축 가능
  - 또한, 모든 정보가 집중된 중앙서버 및 이를 관리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내·외부적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

### 2. 가상통화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

□ 가상통화는 효용성에도 불구하고,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

- ❶ 투기적 수요, 가상통화 분리(하드포크)\*,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손실발생 가능

\* '17.8월 블록체인 업그레이드로 비트코인(BTC)과 신설된 비트코인캐시(BCH)로 분리, '16.7월 해킹 사건 이후 S/W를 업그레이드한 이더리움(ETH)과 기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재상장시킨 이더리움클래식(ETC)으로 분리

- ❷ 가상통화의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거래, 랜섬웨어·해킹 대가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거나,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·다단계 등 사기\*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

\* '빅코인'에 대한 투자를 빙자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140억원대 자금 편취('17.6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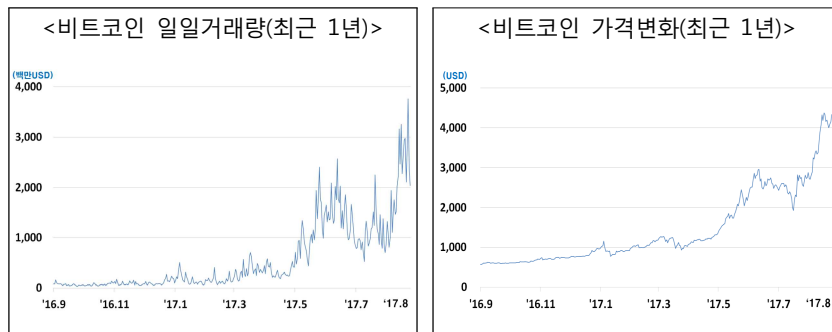
- ❸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해킹이나 암호키 유실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, 고객자산 탈취 등의 사고 발생

\*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'야피존'은 전자지갑 해킹 사고로 약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탈취('17.4월), '빗썸'은 직원 PC가 해킹되어 약 3만여명의 고객정보 유출('17.6월)

### 3. 가상통화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불가피

#### □ 최근 가상통화 관련 범죄와 소비자 피해가 빈발

- ① 마약거래, 랜섬웨어 등 불법거래나 유사수신·다단계와 같은 사기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
  - 현재 규제가 미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악용한 자금세탁, 탈세 등 추가범죄도 우려되는 상황
- ② 교환의 매개로 개발된 가상통화가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단순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
  - 당초 개발 목적인 교환의 매개로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인 반면, 최근 거래량·변동성은 과도한 양상



출처: coinmarketcap.com (전세계 거래량·가격 기준)

➡ 가상통화가 당초 개발목적인 교환의 매개기능을 넘어서서 각종 범죄 또는 단순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할 필요

### IV. 대응방향

◆ 가상통화의 성격과 효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정립할 필요

- ①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“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”으로, 현 시점에서 화폐·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
- 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거래는 금융거래는 아니나 유사금융거래로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 필요
  -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거래투명성 확보, 소비자보호를 위해 실행가능한 조치들은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,
  - 유사수신 등 유사금융거래에 대한 사각지대(loophole) 보완, 자금세탁방지 규제 등 새롭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규제를 신설
- ③ 아울러,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범죄·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호히 대응
  - 유사수신·다단계 등 사기범죄는 「합동단속반」을 구성하여 집중단속기간 동안(~'17년말) 단속을 실시하고, 해킹 등 고객 정보 유출사고도 철저히 조사·제재
  -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제도 구축 추진
- ④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금융업 규제 문제, 과세 문제 등은 추후 각국 정부, 국제기구 등의 논의·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

## 1. 거래투명성 확보,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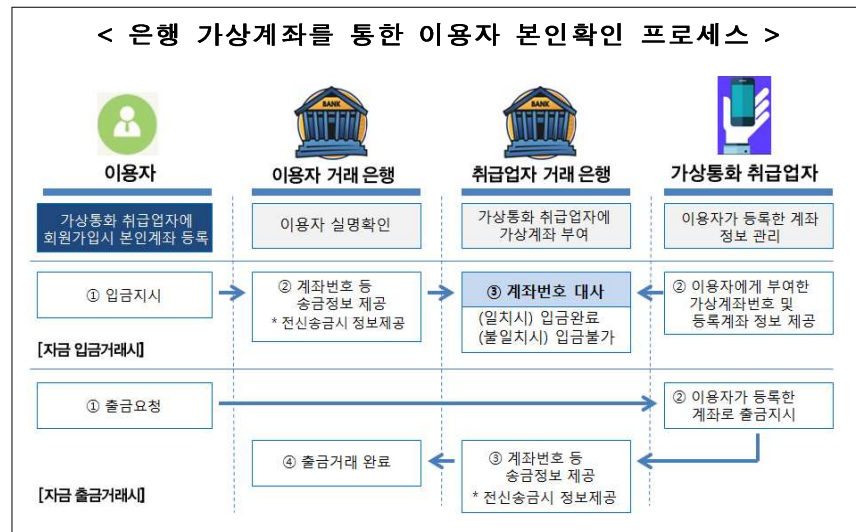
### 단기 실행방안

#### ①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등 거래투명성 강화 (금융위·금감원)

##### ①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

-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
- 취급업자가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은행의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, 자금추적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

⇒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정보(성명, 이용자의 은행계좌, 취급업자가 부여한 가상계좌번호 등)를 확인하고,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·출금되도록 관리하는 방안 추진



#### ※ 은행의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시 준수사항(안)

-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 본인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사절차 등을 마련
- 이용자 본인확인 등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계좌 거래중단을 고려
- 이용자가 회원가입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등록된 본인계좌에서만 입·출금 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·관리

##### ②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를 강화

-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 이용자의 입·출금 거래시 자금세탁 행위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
-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수집된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을 은행에 안내하고('17.9월), 동 유형과 관련하여 은행의 의심거래보고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

※ 은행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심거래유형을 보완하여 추가 안내('17년말)

#### ※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 예시

-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분산출금하거나 다수인에게 송금
-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가상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빈번하게 입금

\* 은행의 거래상대방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임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유사업종(전자상거래업, 기타 소매업 등)도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

⇒ 상기 ①·② 조치들을 통해 i) 가상통화거래의 시작·종결(원화 입·출금) 시점의 자금추적이 용이해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의 기반이 마련되고,

- ii)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·출금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, 대포통장 등 범죄악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

## ②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시 거래투명성 확보 (기재부 등)

-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\*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 강화 및 거래투명성 확보
  - \* 기재부, 한은, 금융위, 금감원
-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단계에서 송금방식(가상통화 활용여부 등) 등록, 매일 한은에 거래내역 보고, 정산내역 기록·보관 등 실시

## ③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추진 (금융위)

-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(특정금융정보법), 실명확인(금융실명법) 규제를 적용('17.7월)
  - 이 경우 가상통화를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도 적용
-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규제도입 추진(특금법 개정)
  - \* 카지노 사업자는 특금법('07년) 및 시행령('08년) 개정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과 칩의 거래를 각각 '금융회사등'과 '금융거래'에 포섭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
  - ※ FATF(자금세탁방지기구)는 '15.6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고객확인, 기록보관, 의심거래보고 의무 및 감독당국의 감독·제재 필요성 명시

## ④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율규제 마련 권고 (금융위·금감원)

- 가상통화 취급업자\*에 딸린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자율규제안에 반영토록 권고
  - \* '17.하반기중 협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영업행위준칙 등 마련 예정

### ※ 가상통화 취급업자 자율규제(안)

- 거래량 폭증에 따른 서버다운 등 전산문제 개선을 위한 서버 확장, 시스템 개선
- 고객정보 및 예치자산의 구분관리, 암호키(private key) 안전관리 방안 마련\*
  - \* 예: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(cold storage), 다중키로 관리(업체 외 제3의 기관에 분산보관)
- 민원응대를 위한 콜센터 등 고객센터 확장

### < 스위스의 가상통화 자율규제 사례 >

-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금융당국(FINMA)의 인가 없이 자율규제조직(SRO)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영업 가능
  - 약 12개의 자율규제조직이 존재하며, 대표적인 기관인 금융서비스표준협회(VQF)에 Bitcoin Suisse, BTC Express, Bity 등의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가입

## 법적·제도적 장치 강화

## 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(금융위)

-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명확화\*
  - (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정의조항 정비·확대)
  - \* (현행) 원금 또는 원금초과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, 예·적금, 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행위를 금지·처벌
  - (개정 예시) 원금 또는 원금초과금액이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가상통화 거래 또는 가상통화를 가장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행위도 대상에 추가
- 또한,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\*하고,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·추징 규정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
  - \* (현행) 5년 이하·5천만원 이하 → (개정안) 10년 이하·5억원 이하

## ⑥ 가상통화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(금융위)

-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·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려움
- ⇒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,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'가상통화거래행위'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(가칭 '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')
  - \* (예)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를 취득·교환·매매·중개·알선·보관·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
- 가상통화의 매매·중개·알선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소비자보호,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도입
  - \* (예)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, 설명의무, 다단계·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의무 등
- 가상통화 거래시 취급업자의 신용공여\*,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·처벌
  - \* 입법 이전에 취급업자가 이용자에게 신용공여하는 부분도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여부 조사
- 지분증권·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조달(ICO)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



## 2.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

### ① 「가상통화 합동단속반」 구성 등 범죄 단속처벌 강화 (검찰·경찰·공정위 등)

- 경찰·금감원 합동으로 「(가칭) 가상통화 합동단속반」을 구성하여 가상통화 관련 다단계·유사수신 등 사기범죄에 대해 집중단속기간(~'17년말)을 정하여 단속 실시

- 또한, 피해규모·범죄수법·서민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수사(검찰)

\* 「유사수신행위법」, 「방문판매법」 위반 및 사기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

- 다단계공제조합(직접판매·특수판매공제조합)과 협조하여 다단계 방식 위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(공정위)

- 다단계공제조합을 통해 집중제보기간\*을 운영하고, 범죄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의뢰

\* 다단계공제조합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설치하고,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 수준이 높은 제보 건에 대해 다단계공제조합에서 50~200만원의 포상금 지급

- 가상통화 거래 추적기술 연구, 압수·몰수 등 범죄수익 환수 방안\* 강구 등 범죄대응체계도 구축(검찰·경찰)

\* 현재는 가상통화 취급업자 계정 동결 후 암호키 저장매체 압수, 수사기관의 가상지갑에 이체하여 압수 등으로 실무적으로 운용

#### < 최근 가상통화 관련 국내 범죄 단속 사례 >

-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거래한 美 한인갱단, 국내 판매업자 등 71명 검거('17.5월)
- 불법음란물 사이트 개설 후 회원(121만명)으로부터 이용요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운영자 8명 검거, 범죄수익(216 비트코인) 압수('17.5월)
- 가상통화인 '원코인'에 투자하면 최고 1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70억원을 수신한 원코인 판매업체의 그룹장 등 5명을 방문 판매법 위반죄로 구속기소('17.6월)
- 가상통화 '헛지비트코인'을 구입하면 6~7개월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기망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35,000여명으로부터 1500여억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를 사기죄 등으로 검거('17.8월)

### ② 해킹 등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철저한 조사·제재 (방통위 등)

-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 중심으로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\*하고,

\*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정보통신망법상 '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'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,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 의무 등을 지님

- 조사결과에 따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,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\*

\*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·관리적 조치 불이행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, 보호조치 미이행과 개인정보 유출간 인과관계 입증시 벌칙 적용 가능

-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,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하여 전산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

- 시범운영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,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PIMS) 인증 참여를 지원(방통위)하고, 업체 수요가 있을 경우 전산보안 컨설팅, 취약점 점검 등도 지원(인터넷진흥원)

### ③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계 구축 (금감원·공정위 등)

- 금감원이 은행권 협조를 통해 은행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자율규제 준수여부를 모니터링

- 또한, 금감원은 파악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정보를 공정위·검찰·경찰·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상시 공유

- 취급업자 - 경찰 - 금감원간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 대포통장,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심 정보를 공유

- 공정위는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검토

- 국세청은 공유자료를 토대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사업소득 등 과세자료로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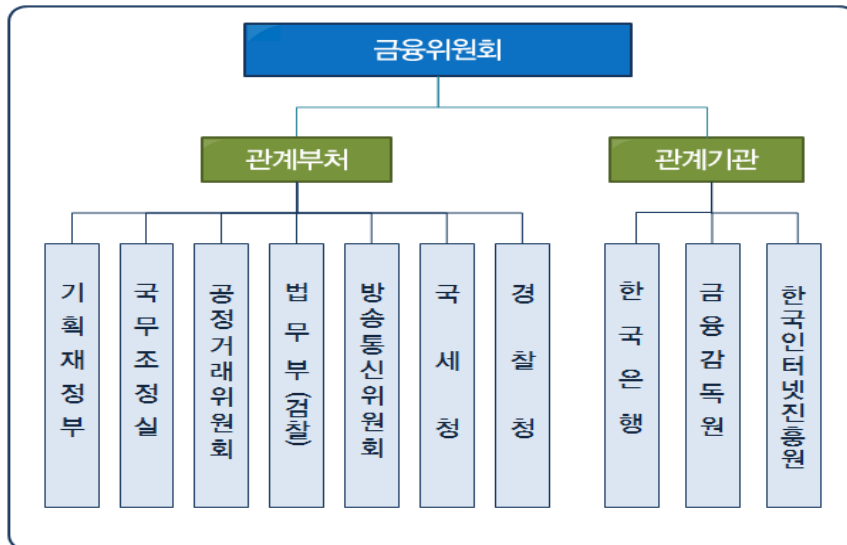
### 3. 규제·감독 문제 검토

-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,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, 국제기구 등의 논의·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

## V. 향후 계획

- 관계기관 합동 TF(주재: 금융위 부위원장)\* 구성·운영
  - 기존 가상통화 실무 TF를 확대하여 국조실, 공정위, 법무부(검찰), 방통위, 국세청, 경찰 등도 참여(관계기관 국장급)
- \* 분기별로 개최('17.9월, '17.12월)
-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(주재: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)를 매달 개최하여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

### <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조직도 >



추진과제	필요조치	소관	추진일정
<b>1. 거래 투명성 확보,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</b>			
<b>&lt; 단기 실행방안 &gt;</b>			
①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등 거래투명성 강화	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,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를 강화	금융위, 금감원, 은행 등	'17.12월
②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시 거래투명성 확보	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모나코 거래투명성 강화	기재부, 한은 등	지속
③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부과 추진	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, 국내거래에 대한 규제도입 추진	금융위	지속
④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율규제 마련 권고	소비자 보호사항을 자율 규제안에 반영 권고	가상통화 취급업자, 금융위·원	'17.하반기
<b>&lt; 법적·제도적 장치 강화 &gt;</b>			
⑤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	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처벌 근거 명확화 등	금융위	지속
⑥ 가상통화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	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가상통화거래행위 규제	금융위	지속
<b>2.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</b>			
① 「가상통화 합동단속반」 구성 등 범죄 단속·처벌 강화	가상통화 관련 사기 범죄 집중단속, 범죄 대응체계 구축 등	검찰, 경찰, 금감원, 공정위	지속
② 해킹 등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철저한 조사·제재	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·제재,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지원 등	방통위, 인터넷진흥원	지속
③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계 구축	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조사 및 정보의 상시 공유 등	금감원, 공정위 등	'17.10월
<b>3. 규제·감독 문제 검토</b>			
①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금융업 규제 여부 검토	시장 추이, 각국 제도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대응방안 마련	금융위, 금감원, 한은 등	지속
② 가상통화 관련 과세문제 검토	가상통화의 법적 성격,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과세 문제 검토	기재부	지속